

# 한국인과 국제안

옥창준\*

[서평] 김도민(2025), 『냉전의 진영 너머로:  
남북한의 중립·비동맹·제3세계 외교(1948~1976)』,  
역사비평사, 568쪽.

## 1. 조선인과 국제안

1929년 5월부터 6월까지 호암(湖巖) 문일평은 「조선인과 국제안」이라는 글을 『조선일보』 지면에서 연재한다. 그는 동시대의 조선인이 마치 ‘컴컴한 굴 속에서 자라난 물고기’처럼,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야와 안목이 어두워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유학(儒學)을 받아들인 조선인들은 중국 이외에 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이 숭상한 중국은 관념상의 중국이었지, 실제 중국이 아니기도 했다. 조선인들은 현실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환상 속의 중국을 상대할 뿐이었다.

물론 조선 시대에도 바깥 세계를 경험한 이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이들은 바깥 세계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추지 못했다. 문일평은 조선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전에 약 1,000년간 선진 문물을 소개해 오던 유학생과 구법승이 자취를 감추었고, 그 결과 국제적 안목, 즉 국제안(國際眼)이 무더지고 말았다고 절망했다. 오랫동안 누적된 국제적 감각 부족은 결국 조선인들이 근대국가 건설에 낙오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문일평은 판단했다.

그렇다면 문일평의 탄식으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한

---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정치학 전공 조교수

국인의 국제안은 어느 정도로 확장되었을까. 매년 3,00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해외를 경험하는 지금, 우리의 국제안은 그만큼 넓어졌을까. 이후의 역사적 전개를 한번 살펴보자. 문일평이 살았던 식민지 시기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외교’의 경험이 부재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고등문관시험에서 외교과에 합격한 식민지 조선인 장철수가 유럽과 남미에서 일본을 대표하여 외교를 살짝 맛본 게 전부였다. 물론,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한반도 바깥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힘쓰던 이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독립이라는 대의가 앞섰기에 국제정세의 전모를 읽어낼 여력을 지니지 못했다. 부족한 국제적 안목은 해방정국, 38선 분단, 끝이어서 진행된 점령과 신탁통치를 거치며 그대로 이어진다.

이후 한반도를 드리운 냉전 질서 역시 국제안을 기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다행히도 냉전 시기에 한반도인들의 선진 문물의 수용은 제한적으로나마 복원되었다. 남한인에게는 미국과 자유 진영의 문호가 개방되고, 북한인에게는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또 다른 세상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인 모두 그들의 눈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눈을 빌려 반쪽의 세상만을 바라보았다.<sup>1</sup> 남한으로 초점을 좁혀본다면 남한이 속한 국제질서의 지도국인 미국이 여러 개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반하여, 남한은 미국의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있었다.<sup>2</sup> 남한이 외교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면 할수록, 미국이 설정한 질서 내에서 남한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이는 남한 외교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진영

- 
- 1 이는 지식체계의 영역에도 부정적인 유산을 남겼다. 탈식민 국가 한국의 경우 냉전 질서의 작동 방식 자체를 탐구하는 ‘국제정치학’이나 냉전 질서 너머의 지역을 관찰하는 눈을 기르는 ‘지역연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 2 한국외교의 미국 의존에 대한 당대의 예리한 비판으로는 이용희(2017), 「우리나라의 외교를 위하여: 외교관 자랑이나 이상의 선언이 아니다」(1958), 『동주 이용희 전집 4: 한국외교사와 한국외교』, 연암서가; 최근에는 대미추종을 해온 한국에는 외교가 없다는 전직 외교관의 도발적인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다. 이창천(2025), 『명품외교의 길: 좌파 외교관이 본 한국 외교』, 진인진.

내에서 자족하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했을까.

우선 해방 이후 냉전기 한반도 국가들의 눈으로 바라본 냉전의 공간을 나누어서 살펴보자. 한국의 러시아 연구자 신범식은 러시아의 공간 인식을 크게 명분의 공간, 실력의 공간, 보상의 공간, 가능성의 공간으로 정리한 바 있다.<sup>3</sup> ‘명분의 공간’은 러시아가 세계 강대국으로서 당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미국·유럽 중심의 지구적 차원의 정치 무대를 뜻하며, ‘실력의 공간’은 러시아가 자신의 앞마당으로 여기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핵심 무대인 유라시아 지역을 뜻한다. ‘보상의 공간’은 러시아가 미국·유럽과의 외교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위상을 만회하기 위해 진출하는 중동·아시아 지역을 뜻한다. ‘가능성의 공간’은 기회가 된다면 러시아가 냉전 시기만큼의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프리카·중남미·대양주 지역을 뜻한다. 비록 지구적 강대국 러시아의 관점에서 제시된 공간론이지만 이 틀은 냉전기 남북한 외교에도 빗대어 적용해볼 수 있다.

## 2. 한반도인의 냉전 공간

문일평이 아쉬워했듯이, 조선인들은 세력균형에 기초한 근대 국제질서에 적응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고 그 결과 국제안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명·청이 주도한 중화 질서에서 유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질서의 안정성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사대 외교가 진행되었고, 그 주변 국가들과 교린 외교를 전개했지만, 국가들의 평등한 관계에 기초한 지금과 같은 의미의 외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 국제질서와의 만남 속에

3 이는 신범식(2009), 「21세기 러시아의 동맹·우방 정책의 변화와 전망」, 『EAI 정책리포트』 41, 동아시아연구원.

서 조선과 비슷한 운명에 놓인 유럽과 아시아의 소국들을 향한 관심이 일부 존재했지만, 이는 번역서를 통한 간접 체험이었지, 직접 경험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연대로 발전하지는 않았다.<sup>4</sup>

그리고 이후 중화 질서를 대체한 것은 근대 국제질서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였다. 식민 모국과 식민지라는 위계적 질서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무너졌으나, 식민지 조선인들은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는 여전히 부족했다. 전후 연합국을 중심으로 태동한 유엔(UN)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고자 했으나, 냉전의 도래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이 바로 시작되고 말았다. 38선을 두고 미국과 소련에 분할 점령된 한반도는 이와 같은 대립의 최전선이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넓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sup>5</sup>

이와 같은 전략 환경 속에서 한반도인들의 외교는 대상이 되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그 실천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명분의 공간'이 존재했다. 전후 질서의 축인 유엔이 그 핵심 공간이다. 남한의 경우, 유엔 총회에서 국제적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외무부(외교부)의 핵심 과제였다. 바꾸어 말하면 1948년 12월 유엔 총회가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논리를 지켜내고 이를 다른 국가에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는 분단국가인 남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했다. 초기 유엔은 기본적인

4 다만 심정적으로 '망국'의 사례를 보면서 동정하는 태도는 존재했다. 『애급근세사』(埃及近世史), 『월남망국사』, 『파란말년전사』(波蘭末年戰史) 등이 번역되어 소개된 것도 이 시기였다. 망국의 서러움을 나누는 베트남인과 조선인의 기록으로는 노영순(2010), 「식민 경험 공유하기: 한국과 베트남」, 『황해문화』 68, 새얼문화재단; 서여명(2010), 「중국을 매개로 한 애국계몽서사 연구: 1905~1910년의 번역작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48-59; 다양한 국가의 경우를 보며 약소국 저항과 동맹을 모색한 사례는 김현주(2024), 「계몽운동기 제국주의 비판과 약소국 동맹론」, 『상허학보』 70, 상허학회.

5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아시아 인식 궤적은 이전의 동양 인식을 계승하면서 발전한 측면도 있었다. 이를 자세히 다룬 연구로는 전상숙·홍정완(2018), 『함께 움직이는 거울, '아시아': 근현대 한국의 '아시아' 인식의 궤적』, 신서원.

으로 자유 진영 국가들의 수적 우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남한은 유엔에 소속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독정부 승인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분투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의 경우, '실력의 공간'은 자신의 영역인 유라시아 지역을 뜻한다. 반면 냉전기 남한의 경우 자신의 앞마당으로 여길 수 있는 공간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였겠지만, 한국전쟁을 통해 휴전선이라는 경계선은 고착화되고 만다. 그렇기에 북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간이 남한의 입장에서는 '실력의 공간'이 되었다. 남한은 유엔 외교를 주축으로 자유 진영 강대국과의 밀착을 통해 이를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실력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남한의 우위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은 '명분'을 '실력'으로 전환한 외교적 성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물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자유 진영의 핵심 국가들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국만큼 개입하지는 않았고, 또 자유 진영 내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 측면이 있기는 했다). 남한 외교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명분의 공간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명분의 공간을 실력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남북한 경쟁에서 확고한 '우방'을 널리 확보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명분의 공간'이 유동하는 경우였다. 먼저, 유엔에 탈식민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여, 총회의 분위기가 자유 진영 우위의 구도가 아니게 될 때, 남한의 기존 외교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의 공간'을 찾게 된다. 이때 주로 발견되는 지역이 바로 '중립' 지대, 이른바 중립·비동맹·제3세계 지역이다. 자유 진영도 공산 진영에도 명시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를 펼치면서, 남한은 '명분의 공간'에서 흔들린 위상을 보상받고자 했다. 혹은 이들의 지지를 새롭게 확보하여, 외교적 실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명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공세적인 외교적 진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기존의 외교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수세적 차원에서 나섰다는 점에서 복합적 성격을 띠었다. 주로 이 '보상의 공간'은 남한의 경우, 동남아시아부터 중동·아

프리카 지역까지 넓게 포괄했다.<sup>6</sup>

냉전기 남한의 연도별 수교 현황은 이와 같은 공간에 기초한 전략을 잘 보여준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남한과 최초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대만(당시 중화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 필리핀 총 5개국이었다. 필리핀을 제외한다면,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다. 이는 남한에게 제일 중요한 외교무대가 바로 유엔 본부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한은 자유 진영과 반공 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어 필리핀(1949), (남)베트남(1956), 튀르키예(1957), 태국(1958) 등을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자유 진영의 결속을 키워나갔다.<sup>7</sup> 남한이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대거 수립한 기간은 바로 1961년부터 1963년까지였다. 이 시기 남한은 새로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만이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까지 외교관계를 맺었다. 유엔 무대에 신생독립국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명분 차원에서든, 국력 증진의 차원에서든 중요해졌음을 드러낸다.

북한의 외교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북한 역시 초기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중시했다. 북한의 경우,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는 중소 분쟁의 기간 동안 등거리 자주 외교노선의 중요성을 모색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자리잡는다. 남한과 차이가 있다면 북한의 경우, ‘명분의 공간’과 ‘실력의 공간’ 그리고 ‘보상의 공간’이 일치할 때가 많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유엔 진출은 오랫동안 봉쇄되어 있었고, 또 중국과 소련이 사회주의 진영의 주도권을 두고 노선투쟁을

6 마지막으로 ‘가능성의 공간’이 있다. 이 지역은 중남미와 대양주 국가들을 지칭한다. 물리적 거리의 문제로 밀접한 외교관계의 수립이 어려운 지역을 뜻한다. 국력이 상승한다면, 이 지역은 서서히 ‘보상의 공간’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7 한국-튀르키예 관계사에 대해서는 박정근(2022), 「1950년대 후반 냉전의 균열과 한국-터키의 문화외교」, 『역사와 현실』 126, 한국역사연구회.

할 때, 북한은 자국의 국제적 명분을 중립 지역이나 제3세계의 탈식민(사회주의 지향) 국가들에서 찾고자 했다. 또 이를 국내·국제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이 존재했다. 이에 북한은 제3세계 ‘작은 나라들’의 지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했고, 국력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투입했다.

지금까지의 현대 한국외교사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주로 ‘명분의 공간’(유엔)과 ‘실력의 공간’(미국과 자유 진영 우방국 외교)을 다루어왔다. 현대 남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미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컸던 것은 사실이다.<sup>8</sup> 그렇기에 한미관계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를 이해하곤 했다. 그러나 글로벌 냉전사의 연구 축적 속에서 냉전 질서를 구성하는 지도국인 미국과 소련 이외에도 주변국, 나아가 제3세계 연구도 차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김도민이 2020년에 제출한 박사논문은 그와 같은 학문적 흐름의 변화 과정 속에 위치하며, 한미관계사 중심으로 축적된 한국현대사 연구가 글로벌 냉전사 연구로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이기도 하다.<sup>9</sup>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라는 제목이 붙은 박사논문에 기초하여, 문제의식과 연구의 시기를 대폭 확장하여 2025년 역사비평사에서 출간된 김도민의 『냉전의 진영 너머로: 남북한의 중립·비동맹·제3세

8 김도민 연구의 출발점도 한미관계였다. 그는 석사논문에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초기 한미관계를 다루었다. 김도민(2012), 「1948~50년 주한미대사관의 설치와 정무활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비슷한 시기에 북한외교사 연구도 북한-중국 관계, 북한-소련 관계만이 아니라 북한과 제3세계 국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포착하는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도미엔(2022), 『붉은 혁명: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Benjamin R. Young (2021), *Guns, Guerrillas, and the Great Leader: North Korea and the Third Worl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Tycho van der Hoog (2025), *Comrades Beyond the Cold War: North Korea and the Liberation of Southern Af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박아름(2020), 「냉전기 북한의 진영외교 전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상범(2020), 「냉전기 북한의 자주연대 외교 연구: 북한-베트남-쿠바 연대외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계 외교(1948~1976)』는 기존의 한국외교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보상의 공간’을 향한 진출이 어땠으며, 그 동학은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 무대에서의 정당성 논의나,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실력의 외교와 달리, 어쩌면 ‘보상의 공간’을 향한 진출은 남북한이 경험한 최초의 ‘외교’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귀하다. 특히 남한의 외교문서와 북한의 여러 자료를 주된 사료로 삼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자료들을 겹쳐서 비판적으로 읽어내려는 노력이 담긴 노작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냉전의 진영’ 너머의 관계를 어떻게 역사화·현재화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김도민의 책은 남북한의 ‘국제안’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이기도 하다. 약 반세기 전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중립 공간’을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저자의 설명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 3. 진영외교 속 ‘균열’

이 책은 ‘진영 너머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냉전의 진영론이 남북한에 관철되지 않는 지점을 먼저 다룬다. 전개의 개연성을 위한 일종의 사전 정리 작업이다. 이 책의 제1부에서 김도민은 해방된 한반도에서 진영론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남북한의 피식민지 경험을 지적한다.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는 경험은 해방 이후 남한의 외교노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다. 1948년 12월 남한은 유엔의 정부 승인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남한 외교의 큰 승리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후 미국을 위시한 자유 진영의 국가들이 남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한다. 그러나 당시 남한의 외교를 주도했던 이승만은 오랫동안 독립운동에 임한 ‘반일’ 운동가이기도 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와 같은 논리는 반식민주의와 반제

국주의적 논리를 통해 정당화되어야만 했다. 바로 이 지점이 이승만 외교가 냉전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균열 지점이었다.

이승만은 냉전의 전개 속에서 일본의 재무장,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냉전 질서 구축에 소극적으로, 때로는 강하게 저항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컸다.<sup>10</sup> 예를 들어 이승만은 장개석과 반공아시아민족대회를 구상하면서, 여기에 일본의 참가를 배제하고자 노력했다. 심지어 여기에 류큐(오키나와) 대표를 참석시키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다.<sup>11</sup> 냉전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 파트너로 일본을 생각하던 미국, 심지어 대만과도 생각이 달랐다. 이와 같은 차이를 낳은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는 경험이었다.

북한의 경우는 어땠을까. 북한은 꼭 소련과 중국과 유사한 노선을 걷지는 않았다. 북한은 자신의 진영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나섰다지만, 동시에 민족해방운동을 향한 관심을 보였다. 사회주의 이론을 강조하면서도,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인식도 동시에 존재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사회주의 진영의 도움이 절실하던 상황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향한 관심을 강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고, 일정한 수위 조절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진영외교 속의 균열은 식민지 해방의 경험을 중심으로 결속한 중립국과의 공통분모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적대성에 기반한 남북한 관계가 고착되고, 이에 따라 냉전을 넘어서는 시선 자체를 논할 수 있는 사회적 지형 자체가 매우 협소해졌기 때문이다. 김도민의 설명처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는 ‘중립국’으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논의될 수 있었지만, 1954년 제네바회의 당시 인도차이나 문제를 다루는 중립국으로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적색 감시

10 이승만과 미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신유희(2004),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1 나리타 지히로(成田千尋)(2022), 임경화 역,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류큐/오키나와의 귀속과 기지 문제의 변용』, 소명, pp. 87-99.

위원'이라는 이유로 중립국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중립을 바라보는 냉전적 시선이 한국전쟁을 통해 지구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또 다른 한국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이는 인도 네루의 아시아 평화 기획을 시작으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sup>12</sup> 하지만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남북한은 반둥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남한의 갈홍기와 변영태는 반둥 회의에 일본이 참석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일본이 자유 진영을 배신한 채 공산 진영과 가까워지고 있으며, '새로운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둥 회의의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이 대표하는 논리에 따르면 반식민은 반공이자 반일이어야 했으며, 이는 제국주의가 친일이자 친공이라는 논리와 통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한이 생각하는 반식민은 보편성을 얻기란 어려웠다. 북한도 반둥 회의를 이해할 때 이와 같은 회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자유 진영에 어떠한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몇몇 공산 진영 국가들에게는 호응을 얻을 수는 있어도, 지구적으로 볼 때 큰 울림을 줄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논리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의 중립을 바라보는 남북한의 태도에서도 반영된다. 북한은 자유 진영 내의 오스트리아가 중립화되어 독립하는 것이 자유 진영에 타격이 된다면서 환영했지만, 반대로 사회주의 진영 내의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의 중립 지향에 대해서는 이들의 반혁명성을 탓하며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 지향을 논박했다.<sup>13</sup> 남

12 백원담(2022), 「전후 아시아에서 '중립'의 이몽과 비동맹운동: 한국전쟁 종전에서 인도 요인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38, 역사문제연구소; 권현익(2022), 「제3세계 운동의 기원으로서 한국전쟁: 버마의 우 누의 중립주의를 연결고리로」, 『역사비평』 138, 역사문제연구소.

13 유고슬라비아를 바라보는 북한의 인식은 냉전을 바라보는 북한의 인식과 연동하여 끊임 없이 변화했다. 김태경(2021), 「비동맹운동 60주년에 돌아보는 냉전기 북한의 유고슬라

한도 반동 회의와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는 자유 진영을 약화시킨다면서 비판했으나, 헝가리의 중립에 대해서는 반소·반공 노선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의 변주였다.

#### 4. 냉전의 진영 너머로

냉전이 구축한 진영외교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은 ‘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 평화적 공존’ 원칙에 따라 비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나섰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북한-중국 관계, 북한-소련 관계가 미적지근해진 여파이기도 했다. 스탈린 사후 사회주의 진영의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탈식민 국가이자 작은 나라라는 자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이를 대외관계에도 투사하기 시작했다. 반동 회의의 주역이었던 인도, 인도네시아, 버마, 이집트와의 외교 및 통상 관계 수립이 이 시기에 진행되었다.

1955년 반동 회의 이후 유엔의 분위기 역시 바뀌고 있었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활동을 시작했다. 이승만 정부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국들과 일본의 유엔 가입 등을 근거로 남한의 유엔 단독 가입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었다.<sup>14</sup> 유엔 총회의 보증을 받은 남한의 가입이 어렵지 않으리라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1957년 1월 남한의 유엔 가입을 둘러싼 표결에서 찬성 45표와 반대 8표에 이어 기권표가 22표나 쏟아졌다. 이와 같은 기권표는 대개 유엔에 새로 가입한 아시아·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들의 표였다. 이는 남한의 ‘명분의 공간’인 유엔이 서서히 흔들린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비아에 대한 인식 변화, 『역사문제연구』 46, 역사문제연구소.

14 류기현(2024), 「1950년대 중·후반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가입 시도와 남·북한 동시가입론의 대두」, 『통일과 평화』 16-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 정부는 각지 정부에 친선 사절단을 파견한다. 친선 사절단은 당시 현지 분위기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김도민의 책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실제 현장에 갔던 최덕신(동남아시아)과 김정렬(중동·아프리카)은 중립주의 국가들의 반식민 문제를 활용하여, ‘반공’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을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현지에 존재하는 반일 감정, 중국 견제 심리를 활용하여, 반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 국가로의 전변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국가가 지닌 탈식민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전히 남한의 희망사항을 대외관계의 인식틀에 반영한 것이었다. 동남아시아나 중동·아프리카가 서구 국가들을 향해 지닌 감정에 대한 이해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반면, 북한의 행보는 놀라웠다. 1961년 파견된 내각 부수상이자 무역상이었던 리주연이 이끄는 북한 정부대표단은 아시아·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자립경제라는 북한의 이상을 그들과 나누고자 했다. 북한은 반동 회의의 주역 국가들과 접촉하면서, 이들을 북한으로 활발하게 초청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립경제’의 모습을 그들 앞에 선전했다. 초청받은 이들 역시 고도로 공업화되고, 현대화된 북한의 농업을 보면서, 탈식민 국가이자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겪으면서 이러한 성취를 이루어낸 북한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1960년대 남한의 대응은 좀 더 세련되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당시 친선 사절단이었던 정일권은 친미 반공국들에게는 ‘반공’ 경험을, 중립주의나 친공 성향의 국가에서는 ‘식민’ 경험을 호소했다. 정일권은 국제정세의 현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진출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전략이 아니라, 적극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이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도 긍정적인 답신을 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은 허정 과도정부, 장면 정부에서도 이어졌으며, 박정희 군사정부에서도 줄곧 이어졌다.<sup>15</sup>

15 이 시기에 대한 보완적 설명으로는 박정근(2025), 「4월혁명 이후 한국의 중립국·비동맹

군사정부 시기에 흥미로운 점은 친선 사절단이 거점 국가의 외교관계 수립, 공관 설치를 건의하면서, 외무부의 정무국을 아주(아시아), 구아(유럽 아프리카), 미주, 특수지역과(공산 진영) 등으로 세분해서 개편하자는 주문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남한 외교가 유엔 중심의 표결 대결 중심이었다면, 정무국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이들 국가를 그 국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구상이었다. 중립국 외교가 계속될수록 중립국에서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대표들을 만나는 여러 상황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고 지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sup>16</sup>

김도민의 책 『냉전의 진영 너머로』 본문에 나오는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분별하는 인종주의적 태도였다. 아시아인을 향해서는 동일한 정책을 펼치면 되나, 인종적으로 다른 전근대적 사회인 아프리카를 대상으로는 이들의 분열을 잘 활용하라는 조언을 덧붙이는 정도였다. 카이로의 총영사관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논리의 등장도 흥미롭다. 할슈타인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면 북한과 대사급 관계를 수립한 이집트에서 철수해야 하지만, 그 경우 아프리카·중동 외교에서 중요한 거점인 이집트를 북한의 독무대로 만드는 효과를 낼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할슈타인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 없이, ‘탄력적 외교’를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장면은 실제 남한의 중립국 외교가 이념과 현실 속에서 어떤 줄타기를 해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의 후반부는 1970년대 비동맹회의에서 벌어진 남북한의 각축전을 다룬다. 1970년대에는 OPEC 활동, 유엔 내의 G77의 활동,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등이 이어지면서 제3세계 프로젝트가 활발히 가동되고 있었다. 이 와

---

외교와 그 한계, 『역사비평』 153, 역사문제연구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장면 정부 시기에는 한반도 차원의 중립이 함께 논의될 수 있었다면, 군사정부 시기에는 국내적 중립 사상을 탄압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적극 중립국 외교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16 한국 외교부의 지역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양준석(2017), 「한국외교사에서 ‘잔여 지역’ 인식의 변화와 담당외교조직의 변천」, 『한국정치학회보』 51-5, 한국정치학회.

중에 1975년 8월 리마 비동맹 외상회의는 북한의 비동맹회의 가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남한의 가입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남한 외교에 일격을 가했다. 이 사건은 훗날 박정희 정부의 외교를 이끌었던 김동조 외무부 장관이 해임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왜 북한은 하필 1975년에 비동맹회의에 가입하고자 했으며, 남한은 덩달아 동시가입하고자 했던 것일까? 김도민은 이 책의 제7장에서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세밀하게 복원해내는 데 성공한다. 이미 1975년에 전조가 보였다. 1975년 2월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원자재에 관한 개발도상국회의 중에 북한의 참석이 결정된 것이다. 이미 다카르에 체류하고 있던 북한 정부의 경제 대표단이 이 결정 직후, 북한이 회의 도중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회의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남한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남한 정부는 8월 리마 회의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책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비동맹회의의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히 임했다. 북한은 1975년 3월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에서 가입권고안 채택까지 확보했다.

이에 남한은 읍서버 자격으로 리마 외상회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남북한이 동시에 읍서버나 게스트로 초청되거나, 동시에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작전에 임했다. 자유 진영에서의 이탈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북한의 단독가입 저지를 위한 ‘물귀신 작전’에 나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남한에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존재였다. 이를 위해 남한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 비동맹회의에 가입하기 위해서 “미군의 철수를 요청할 것”이라는 문장까지 삽입하기에 이른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일성이 1975년 6월 유고슬라비아를 공식 방문하여, 티토와 전격적으로 회담을 한 것도 비동맹회의의 가입을 위한 북한식 노력이었다. 1975년 8월 리마에서 의외로 싱겁게 북한의 가입은 이루어졌지만, 남한의 가입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한 외교가 맞이한 첫 패배였다. 1975년 리마에서의 북한 단독 가입 성공은 단순한 외교적 패

배가 아니라, 남한 외교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남한은 여전히 미국 중심의 질서에 의존하면서도, 비동맹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반면 북한은 비록 선전적 성격이 강했지만, 제3세계의 언어를 더 적극적으로 구사했다. 이 지점에서 냉전의 진영 너머로 나아가려는 남북한의 경로는 엇갈리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리마에서의 좌절이 남한 외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차원의 국제적 돌파구를 모색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비동맹 무대에서의 패배는 남한에게 더 이상 유엔 표결과 진영외교만으로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고, 이는 ‘이벤트 외교’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이어졌다. 그 상징적 결과가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였다. 이후 남한은 스포츠와 문화, 개발 경험을 매개로 제3세계 국가들과 관계를 재구성하며,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는 보편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올림픽의 유치는 단순한 국가 홍보가 아니라, 냉전 말기 질서 속에서 남한을 ‘성공한 발전도상국’으로 재위치시키는 외교 프로젝트이자 사회개발 프로젝트였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남한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과의 수교를 대폭 확대했고, 원조·기술 협력·교육 교류를 결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했다. 결국 리마의 패배는 남한 외교를 축소시킨 사건이 아니라, 진영 중심의 외교를 넘어 다층적 세계 참여로 나아가게 만든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보상의 공간’이었던 중립·비동맹·제3세계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도로 재편되고, 서로 경제발전 수준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던 남한이 북한과의 국력 경쟁 구도에서 앞서고, 제3세계 국가들을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구분되는 ‘후진적’ 존재로 상상하기 시작하는 대목까지 김도민의 책이 똑같은 구도와 비중으로 다룰 수 있었을까. 저자의 묵직한 연구를 읽으면서 내내 사라지지 않았던 고민 중 하나다. 다양한 국가의 자료들을 통해 저자가 하나의 그림에 다양한 대상을 배치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다양한 대상을 통

해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역사상을 얼마나 그려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책이 다룬 1976년 이후의 일을 저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제3세계를 향한 관심이 활발히 일어났지만, 동시에 남한이 과연 제3세계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던 1980~1990년대가 김도민의 후속 작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리라 짐작한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냉전의 승리자 편에 섰던 남한의 입장에서 냉전기 외교의 경험은 어떻게 총결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일정하게라도 이 책에서 제시되었다면, 저자의 진의가 좀 더 수월하게 이해되었으리라.

## 5. 준제국(quasi-empire)의 눈<sup>17</sup>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결론적인 「중립과 평화」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중립적 사유의 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는 강대국의 힘에 기대어 평화를 보장받는 ‘수직적’ 평화보다는, 도덕과 윤리를 통한 ‘수평적’ 평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평적 평화란 줄서기를 하지 않겠다는 (non-alignment), 상호대등한 주체들 간의 동맹(alliance)과도 통한다. 그리고 적어도 냉전기 중립국과 비동맹 국가들은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이와 같은 길을 어렵사리 추구해 왔다.

무엇인가를 ‘비’(非)한다는 것은 부재 또는 부족이 아니라 제시된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이를 통해 존재하는 세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sup>18</sup>

17 ‘준제국의 눈’이라는 표현은 천평성의 ‘제국의 눈’을 살짝 비튼 표현이다. 천평성(2003), 백지운 외 역, 『제국의 눈』, 창비 참고. 2025년 한국의 국무총리 김민석은 ‘제국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18 사인 최(2021), 「비동맹 미학,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보의 논리, 평화의 논리: 한반도와

이처럼 저자는 단순한 수평적 평화를 넘어서 ‘일상적 평화’로까지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의 관계가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필자도 깊이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한반도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중립’과 이에 기초한 수평적 차원의 외교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단순한 중립의 사상이 아니라, 이를 상호 대등한 주체들 간에 엮어 낸 경험이 우리에게는 국내정치적 차원이든, 국제정치적 차원이든 찾기가 어렵다. ‘중립의 꿈’이 탁상공론이나 대학과 지식인들만의 논의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에 천착하면서 중립과 평화의 실천 양상을 저자가 확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김도민의 이번 작업이 지니는 가장 큰 의의는 한반도 국가들의 외교에 있어 중립·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의 위치성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여전히 우리와 멀게 느껴지는 이 지역 국가들의 움직임을 향한 연구를 촉발하리라 기대된다. 그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관련 국가들의 아카이브에 기초한 연구들까지 등장한다면, 김도민이 이번 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한 한국 외교문서와 더불어 냉전사 연구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다만, 한반도 국가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자국의 식민 지배 경험과 다른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탈식민’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찰했는지, 오히려 한반도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비판적 차원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1960년대부터 민족 건설을 달성한 한국과 민족을 막 창출해야 하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 탈식민 국가들은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인식이 등장했다.<sup>19</sup> 이제 발전도상국을 넘어 ‘글로벌 노스’이자 준제국의 일원이 된 남한(한국)은 자국의 경험을 전파하는 데 강점을 보이지만, 제3세계에서 등장한 지식

세계』(남영호 편), 에테르, pp. 204-205.

19 차기벽(1978),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까치, p. 74; 최근에 이와 유사한 논지에 입각한 책으로는 박정욱(2025), 『선 긋는 국가: 아시아 신생독립국들과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무엇이 다른가?』, 지식프레임.

을 자기화하거나, 이를 타국의 경험과 견주어 엮어내는 역량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지식 생산이나 수용의 관점에서 보아도 남한의 경우, 직접 비서구의 지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서구 지식장의 중개를 통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이 아니라 제국의 눈을 빌리는 준제국의 상태이다.

중립·비동맹·제3세계는 누군가의 표현을 빌려보면 한국에게 있어 “공통의 운명을 일깨우는 존재일 수는 있어도,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는 대상은 아니었다.”<sup>20</sup>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 꼭 공동의 운명을 의미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냉전기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주체식 사회주의’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을 때, 북한인들은 해당 지역의 미숙함을 탓하는 쪽을 택했다. 최인훈의 소설 『태풍』은 어쩌면 한국이 탈식민 국가들과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순간의 운 좋은 결과물일지도 모른다.<sup>21</sup>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움직임은 1970년대 한국에 『태풍』을 남겼지만, 최인훈의 『태풍』은 현실과 사유의 변화를 얼마나 이루어냈을까. 쉬이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

『태풍』과 비슷한 해 한국의 명민한 외교관이었던 김승호(1937~2021)의 행적을 따라가보자. 주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3등 서기관을 거쳐 외무부 동부아프리카 담당관이었던 김승호는 1978년 「비동맹국가에 대한 외교전략」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다.<sup>22</sup> 그는 비동맹 중립주의의 본질이 역사적 자아 발견에 대한 주체 의식의 발취이며, 그런 견지에서 비동맹이란 자주외교에 입각한 국제정치의 참여를 뜻한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sup>23</sup> 다만, 그랬던 김승호 역시 한국의 외교정책 관점에서 비동맹 국가를 우경과 좌경,

20 장인성(2017),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 175.

21 최인훈의 『태풍』과 최인훈이 상상한 아시아에 대해서는 장문석의 연구가 좋은 길라잡이가 된다. 장문석(2025), 『최인훈의 아시아: 연대와 공존의 꿈으로 세계사 다시 쓰기』, 틈새의시간.

22 김승호는 코트디부아르를 거쳐 벨기에, 스웨덴에서 외교 활동을 했기에 유럽통합이나 스웨덴의 중립 노선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23 김승호(1978), 「비동맹국가에 대한 외교전략」, 외교안보연구원, p. 10.

신념형과 편의형으로 좀 더 분별하여 구분하는 정도에 그쳤다. 좌경과 우경 국가를 넘어서, 그들이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지,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지만 더 들여다봤을 따름이다. 김승호는 이들 국가를 하나의 카테고리라 아니라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한국외교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금 보면 매우 소박해보이는 김승호의 주장은, 당대 김승호가 지닌 개인적 한계가 아니라 한국의 세계관에서 나올 수 있는 현실적 최대치이기도 했다. 최인훈이 말한 “약소국들의 뭉친 힘”과 젊은 외교관 김승호가 추구한 한국의 비동맹 정책은 과연 어디까지 만날 수 있었을까.<sup>24</sup> 혹은 이후 한국의 역사 전개에서 이 둘의 결합은 그저 꿈에 불과했던 것일까.

김도민이 책에 나오는 냉전기 한반도인들이 보여준 행적은 식민지 시기 문일평이 바랐던 국제적 안목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현재 글로벌 강대국 중 하나로 성장한 남한인의 국제안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어떤 지평에서 파악하고, 세계인들에게 외교적 비전을 던져줄 수 있을까.<sup>25</sup> 제3세계가 아니라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남한 내부 안에서 대두하고 있는 극우 세력 등을 포함하여 한반도 차원, 글로벌 차원, 국내정치 차원의 삼중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외교적 배합과 정치적 곡예가 가능할까. 저자의 노작이 지금 현재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

24 1978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은 『제3세계관계자료집』을 내기도 했었다. 비록 일본어 자료집을 중역한 것이었지만, 선진국 운운하는 지금의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자료집이 있는가?

25 한국의 피해자성에 기초한 연대를 넘어서 가해자성을 함께 성찰하는 논의로는, 신지영 (2020),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성’과 아시아 인민연대: 오키나와의 한국전쟁, 한국의 베트남전쟁, 그리고 전시성폭력」, 『상허학보』 58, 상허학회.

## 참고문헌

- 권현익(2022), 「제3세계 운동의 기원으로서 한국전쟁: 버마의 우 누의 중립주의를 연결 고리로」, 『역사비평』 138, 역사문제연구소.
- 김도민(2012), 「1948~50년 주한미대사관의 설치와 정부활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범(2020), 「냉전기 북한의 자주연대 외교 연구: 북한-베트남-쿠바 연대외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호(1978), 「비동맹국가에 대한 외교전략」, 외교안보연구원.
- 김태경(2021), 「비동맹운동 60주년에 돌아보는 냉전기 북한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인식 변화」, 『역사문제연구』 46, 역사문제연구소.
- 나리타 지히로(成田千壽)(2022), 임경화 역,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류큐/오키나와의 귀속과 기지 문제의 변용』, 소명.
- 노영순(2010), 「식민경험 공유하기: 한국과 베트남」, 『황해문화』 68, 새일문화재단.
- 도미엔(2022),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류기현(2024), 「1950년대 중·후반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가입 시도와 남·북한 동시가입론의 대두」, 『통일과 평화』 16-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박아름(2020), 「냉전기 북한의 진영외교 전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근(2022), 「1950년대 후반 냉전의 균열과 한국·터키의 문화외교」, 『역사와 현실』 126, 한국역사연구회.
- 박정근(2025), 「4월혁명 이후 한국의 중립국·비동맹 외교와 그 한계」, 『역사비평』 153, 역사문제연구소.
- 박정욱(2025), 『선 긋는 국가: 아시아 신생독립국들과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무엇이 다른가?』, 지식프레임.
- 백원담(2022), 「전후 아시아에서 ‘중립’의 이몽과 비동맹운동: 한국전쟁 종전에서 인도 요인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38, 역사문제연구소.
- 샤인 최(2021), 「비동맹 미학,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보의 논리, 평화의 논리: 한반도와 세계』(남영호 편), 에테르.
- 서여명(2010), 「중국을 매개로 한 애국계몽서사 연구: 1905~1910년의 번역작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지영(2020),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성’과 아시아 인민연대: 오키나와의 한국전쟁, 한국의 베트남전쟁, 그리고 전시성폭력」, 『상허학보』 58, 상허학회.
- 신범식(2009), 「21세기 러시아의 동맹·우방 정책의 변화와 전망」, 『EAI 정책리포트』 41, 동아시아연구원.
- 신옥희(2004),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양준석(2017), 「한국외교사에서 ‘잔여 지역’ 인식의 변화와 담당외교조직의 변천」, 『한국

정치학회보』 51-5, 한국정치학회.

이용희(2017), 『동주 이용희 전집 4: 한국외교사와 한국외교』, 연암서가.

이창천(2025), 『명품외교의 길: 좌파 외교관이 본 한국 외교』, 진인진.

장문석(2025), 『최인훈의 아시아: 연대와 공존의 꿈으로 세계사 다시 쓰기』, 틈새의시간.

장인성(2017),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전상숙·홍정완(2018), 『함께 움직이는 거울, '아시아': 근현대 한국의 '아시아' 인식의 궤적』, 신서원.

차기벽(1978),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까치.

천광성(2003), 백지운 외 역, 『제국의 눈』, 창비.

van der Hoog, Tycho (2025), *Comrades Beyond the Cold War: North Korea and the Liberation of Southern Af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Young, Benjamin R. (2021), *Guns, Guerrillas, and the Great Leader: North Korea and the Third Worl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